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5월 4일(수), 오후 2~4시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김 수 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1. 들어가며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방침으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노선을 택하였으며, 조선의 전역에 대한 고적조사는 그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평양 일대의 낙랑 유적에 대한 고적조사의 성과가 조선 민족의 타율성, 외인성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면, 경상도 일대의 가야유적에 대한 고적조사, 특히 고분에 대한 발굴은 임나일본부의 실체규명, 더 나아가 고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증명함으로써 현재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를 ‘과거로의 회귀’로 선전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때문에 일제의 가야고분에 대한 고적조사는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고적조사 조직의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한 고적조사 5개년기(1916~1920년)의 가야고분 발굴은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또 줄속으로 진행됨으로써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야사 연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가야고분 고적조사의 전개

일제의 조선고적조사는 목적과 행태, 제도의 마련,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고적조사 1기(1910~1915년)’는 일제의 관학자들이 대한제국 통감부와 제국대학 등의 명을 받아 조사하던 시기이며, ‘고적조사 2기(1916~1920년)’는 법령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고적조사 5개년기와



사진1. 함안 말미산고분군 유리건판 사진
(1914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내 고적조사 전담 부서가 운영되던 시기, ‘고적조사 3기(1931~1945년)’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여 왕실이나 귀족들로부터 지원금을 하사받아 경주, 평양, 부여 등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던 시기이다.

일제강점기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은 ‘고적조사 2기’인 1917~1918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1920년대 이후 고령을 제외한 가야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정식 발굴이 실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방침은 1920~30년대 가야고분의 대규모 도굴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후 ‘보존령’을 제정하고 ‘고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많은 가야고분이 폐허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1) 가야고분 고적조사 1기(1910~1915년) - 사전 조사 시기

일제강점기 가야지역에 대한 최초의 고적조사는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대한제국 통감부의 의뢰를 받아 1909~1914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물을 비롯한 주요고적과 유물을 조사하였는데,¹⁾ 그 중 1910년 10월 하순에 경상도의 고령, 창녕, 함안, 진주 등지에서 가야시대 유적을 조사하였으며,²⁾ 진주에서는 수정봉·옥봉의 고분 3기를 직접 발굴하였다. 그는 이 조사를 가야지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학술조사임을 자부하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의뢰로 국사 교과서 제작을 위한 사료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3회 조사(1913~1914년)에서, 쿠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는 1915년

1) 세키노는 이 조사에서 고건축물, 고적, 유물 등에 대해 종류, 소재, 연대를 분류, 기록하였으며 보존의 필요성을 네 등급 ‘갑을병정’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이후 일제의 고적조사사업과 문화재 정책 수립의 전반적인 기준이 되었는데, 고령, 함안 등 가야지역의 주요 고분군은 대개 을병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2) 1910년 10~12월에 한반도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키노는 이 조사의 가장 큰 수확으로 낙동강 연안의 가야시대 유적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는 장차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를 밝혀줄 가야고분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견해로 생각된다.

한일교섭과 관련한 고대사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도쿄제국대학의 명을 받아 가야지역을 조사하였다.

가야고분 고적조사 1기는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비체계적이고 단발적이었으며, 조사의 행태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을 시도하기 보다는 이미 파괴되어 있는 고분 위주로 관찰하고 그 현상들을 수집, 기록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본격 발굴을 준비하는 사전 조사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2) 가야고분 고적조사 2기(1916~1920년) - 집중 발굴 시기

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개관, 1916년 7월 조선총독부 산하 ‘고적조사위원회’의 발족,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의 시행과 함께 조선고적조사는 대전환기를 맞이한다. 일제는 고적조사를 위한 조직과 법령의 정비를 통해 조선의 전 국토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유린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가야지역의 주요 고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주로 경상도 고령, 창녕, 함안 등지가 대상이었으며, 각 고분군 내에서도 대형의 고분들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학술적 목적 이면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18년 12월 ~ 1919년 1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이었던 야츠이(谷井濟一)에 의해 실시된 창녕 고분의 발굴은 당시 단일 유적의 발굴 사례로는 드물게 초대형 봉토분을 포함한 9기의 고분을 한꺼번에 발굴하였으며, 이로 부터 마차 20대, 화차 2대 분량의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어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발굴로 회자되고 있다.

가야고분 고적조사 2기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적조사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제국대학의 교원이나 조선총독부 소속의 위원 등에 의해 시종 주도 되었으며, 초대형분을 포함한 많은 수의 가야고분을 철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발굴한 시기이다. 이러한 조사행태는 결국 무더기 미보고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3) 가야고분 고적조사 3기(1921~1945년) - 방치·보존 시기

고적조사 5개년기 직후인 1921년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고적조사를 전담할 고적조사과를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을 꾀하였지만, 1923년 9월 관동대지진과 그로 인한 행·재정정리와 긴축재정이 실시되었고 급기야 1924년 말 고적조사과가 폐지되면서 일제의 고적조사사업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로 인해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 역시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 사이 가야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박물관의 구석 자리로 밀려나 버렸고 발굴자들 역시 여기저기로 흩어져 발굴보고는 더욱 요원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고래로 '선조(先朝)의 왕릉'이라 하여 당시까지 잘 보존되어 오던 가야고분들이 고적조사를 통해 내부에 휘황찬란한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도굴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조직되어 주요지역의 고적조사가 재개되기에 이르지만, 1939년 고령 지산동의 고분 발굴을 제외하면 가야고분은 더 이상 정식 발굴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임시의 긴급조사만 실시되었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발령되면서 가야지역의 주요 고분군은 대부분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야고분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인식수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3. 가야고분 고적조사의 의미

1) 정치적 목적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한일병합 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방침으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한 동화주의노선을 채택하였으며, 고적조사 역시 그 일환으로 철저히 계획되고 시행되었다. 일제가 내세운 식민사관의 핵심논리는 '타율성·정체성론'과

‘과거회귀론’ 이었는데, 그 중 선사유적과 평양 일대의 낙랑유적에 대한 고적조사 성과가 전자의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경상도의 가야유적에 대한 고적조사 특히 가야고분의 발굴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증명하는 도구로써 활용하여 조선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2) 발굴 대상으로서의 가야고분

일제강점기 초기 세키노를 비롯한 관학자들의 가야고분에 대한 고적조사는 외형 관찰에 의한 보존가치 평가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조사적 성격의 현황 파악이 주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고분의 발굴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고적조사 5개년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가야고분에서 화려한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자, 고적조사 경향은 고분의 발굴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한 고분군 내에서도 형태나 규모에 따라 균형적으로 발굴하기 보다는 대형분 위주의 발굴이 이어졌으며, 특히 창녕의 교동 7호분과 89호분, 함안 말이산 34호분, 1호분 등은 봉토지름 40m에 이르는 가야지역 최대급 고분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당시 발굴 고분의 선정이 분포조사자들의 조언이나 발굴자들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고적조사자들의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관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고적조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면, 1923년 9월의 관동대지진과 이로 인한 조선총독부의 재정적 압박은 1924년 행·재정정리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일제의 고적조사를 급격하게 위축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경상도의 가야고분은 1931년 설립된 조선고적연구회의 조사대상에서도 거의 제외됨으로써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3) 일제강점기 가야고분의 발굴과 기록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중 발굴의 대상은 외관상 뚜렷한 봉토를 가진 수혈식·횡혈식의 묘제였다. 이들에 대한 당시의 발굴과정을 살펴보면, ① 발굴할 고분의 봉토정상 부근에 피트상의 조사구를 설정한다. ② 석실(석곽)의 천정석(개석)이 노출될 때까지 수직 또는 계단식으로 굴착하여 내려간다. ③ 정석(개석)이 확인되면 그 일부를 제거하고 석실(석곽)의 내부로 들어간다. ④ 내부로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부장유물을 노출한다. ⑤ 유물의 출토상황을 촬영하고 실측을 실시한다. ⑥ 실측 종료 후 유물을 수습한다. ⑦ 실의 평면도·종횡단면도를 작성한다.



사진2. 창녕 교동 117호분 발굴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적조사 5개년기의 가야고분에 대한 발굴 역시 이상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고분 발굴과정에서 봉토에 대한 작업은 봉토로부터 매장주체부의 단벽까지 가능한 빨리 도달하여 내부로 들어갈 통로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적 개선 없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종 동일한 발굴방법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대한 맹목적인 고수는 매장주체부 구조 파악에 중대한 오류를 낳아 현대의 한국고고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일제강점기의 고분 발굴은 매장주체부 내의 상황과 출토유물에만 집중하는 기형적 조사였던 셈이다.

한편, 고적조사 5개년기를 거치면서 고분 발굴에 있어 평판측량이 도입되고 이를 통한 봉토의 측량과 매장주체부, 유물출토상태 등의 실측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유적분포도나 고분배치도의 경우,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측량 작성된 지적도와 지형도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고분 및 고분군의 원상을 가늠케 하는 최상의 자료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별다른 조사나 기록 없이 훼손된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4. 나오며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선고적조사 사업은 ‘조선의 역사를 규명한다’는 목적을 표방하였음에도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한 채 시종 조선총독부의 주도로만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목적에 동조하였던 제국대학 소속의 관학자들과 그럴 듯하게 포장된 제도적 장치가 어우러져 낳은 또 하나의 식민지 정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가야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근대 학문이라는 탈을 쓴 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비학문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였다. 특히 고적조사 5개년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가야고분의 발굴은 고적조사가 식민지 문화정책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와는 달리 천수백년동안 보존해 온 ‘가야왕릉’을 단지 분탕질 쳐 놓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낙랑, 고구려 고적조사사업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